스쿨존 보행자 안전장치 '논란'

경찰청 "음성신호 장치 외에는 모두가 불법 부착물" 판정

수억 들인 '보행신호 보조 장치'…기능 사용 못하고 방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에 앞 다퉈 설치 중인 '보행신호 보조 장치' 대부분이 불법 부착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에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인증한 '음성안내' 장치 외에는 관련 규정상 어떠한 보조 장치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경찰청은 신호등에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LED 신호장치 등의 추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할 때 음성으로 경고해 주는 음성보조 장치 만 합법적인 보조 장치로 인정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의 규격외 추가 기능이 탑재된 보조 장치를 설치하려면 신호등에 부착하는 음성안내 보조 장치와는 별도로 신호등에서 벗어난 다른 공간에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에 경찰청 심의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개조하고 신호등 고유 신호외 추가 신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느냐"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지 우려 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보조 장치가 추가된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계약해 설치하는데 수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도입해 설치 중인 조달우수품목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조 장치'에는 음성안내 기능 외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를 알리는 'LED 신호 장치'를 비롯해 카메라가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를 자동 인식'해 신호체계를 바꿔주는 장치 등이 추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구청의 경우 7억4000여만원을 들여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스쿨존 39곳에 오는 6월 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청도 5억여원을 들여 스쿨존에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심의 규정상 불법 부착물로 판정돼, 앞서 이 장치를 도입한 지자체 대부분이 불법을 감추기 위해 보조 장치 핵심 기능을 아예 꺼놓고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해당 장치를 설치한 서울과 경남지역 모 자치구의 경우 실제 추가 기능을 사용 하지도 못하고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심의 규정상 불법부착물이라 '철거'해야 옳지만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음성 안내 장치만 사용하고, 나머지 불법 보조 장치 사용은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데는 해당 제품을 인증해 주는 '공인 인증' 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이 심의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인증 과정에서 생산업체 대부분이 합법적인 '음성 안내보조 장치'외 추가 기능이 탑재된 보조 장치를 탈착 한 채 인증을 받고 있지만 버젓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조달청의 경우도 경찰청이 심의규정 상 불법부착물로 판정한 추가 기능이 탑재된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달우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추가 기능이 탑재된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양성화시키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특허 기능이 탑재된 특정 회사 제품만을 경찰청이 인증해 줄 경우 시장에서 독과점 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자체들은 '조달우수 품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치 후 추가 기능을 사용도 하지 못할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추가 기능을 탑재한 보조 장치의 경우 단순 음성신호 보조 장치만 탑재된 제품보다 가격이 2~3배 비싸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성능이 인증된 우수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우수품목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청 심의 규정상 추가 기능 대부분이 불법부착물로 확인됐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진보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꽃밭에서 휴식하는 고양이 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7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인근 한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장미가 활짝 핀 화단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시 · 자치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 심각

市 감사위 4건 적발, 29명 훈계 · 주의 조치

광주시와 자치구가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와 일선 자치단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한 결과 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 29명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했다.

광주시 모 과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게시하면서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2014년 22건, 2015년 19건, 2018년 83건 등 총 1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동구와 서구, 북구도 정보공개포털에 민원회신 원문을 공개하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노출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와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은홍 기자

멕시코서 기업전용기 추락 13명 사망

승무원 3명과 승객 10명 등 13명을 태운 기업 전용기 1대가 지난 5일 멕시코 북부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멕시코 당국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멕시코 코아훌라주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중 수색을 통해 코아후일라주 오캄포 인근 산악지대에서 추락해 불탄 기체 잔해를 발견했으며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안전부와 검찰 관리들이 사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추락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추락한 제트기는 봄바르디에 챌린저 601기로 5일 오후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이날 저녁 멕시코 몬테레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아후일라주 상공에서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겼다.

당국은 탑승자들의 신원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탑승자들이 지난 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멕시코 권투선수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의 권투 시합을 관전한 뒤 멕시코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탑승자 중 5명은 55살의 기업가와 그의 부인, 3자녀라고 전했다.

추락한 제트기는 유타주에 있는 보험 및 신탁회사 TVPX사 소속으로 등록돼 있지만 TVPX는 누가 이 제트기를 운영해 왔는지 밝히길 거부했다.

프랑스 파리 소방관 6명 성폭행 연루

프랑스 군 소방대인 파리 소방여단 소속의 소방관 6명이 20살 여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달 15일 벌어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서 활약한 파리 소방대원들이 저지른 범행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3일 노르웨이 출신의 관광객 A는 파리의 한 술집에서 비번인 소방관을 만나 성관계에 동의, 파리 남부에 위치한 소방관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일 아침 숙소에서 소방관 6명의 집단적인 성폭행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호소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가해자는 모두 만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용의자들은 25~35세 사이로 각각 강간과 범죄 신고의무 불이행,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니제르서 유조차 폭발 55명 사망

서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유조차가 폭발해 최소 55명이 사망했으며 일부는 차량이 전복된 후 유출된 기름을 훔치려 했다고 당국이 밝혔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유조차 폭발은 지난 5일 밤 니제르 수도 니아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발생했다.

모하메드 바주움 내무장관은 사망자 이외에 "이번 폭발로 37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대다수가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대학생은 "유조차가 전복된 것은 자정 조금 전이었다"며 "갑자기 기름을 가져가려는 사람들로 몰려들었고, 이후 화염으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아프칸 탈레반, 검문소 공격 군인 20명 살해

6일 새벽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라주에서 탈레반 반군이 군 검문소에 갑자기 쳐들어와 군인 20명을 살해했다고 주의회 의원이 말했다.

탈레반은 이 야간 기습에서 병사 2명을 붙잡아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탈레반 대변인 중 한 명인 카리 아마디는 공격의 배후를 주장했다. 전날에도 탈레반은 북부 바그란주에서 차량 자살폭탄 공격으로 경찰서를 공격해 13명을 살해했다.

미국 특사와 탈레반 대표가 카타르 등에서 17년이 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프간 정부는 나흘전 4일간의 3500명 평화의원회의를 마감하면서 평화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아프간의 아쉬라프 가니 정부를 미국의 괴뢰라며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미군 자료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총인구(3000만 추정) 비율은 65%에 미달하고 탈레반은 10%가 넘는 주민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